

[2020수시] 역대 최대 77.3% 선발

오는 6~10일 원서접수...주요대 학종 비중↑

최대 6회 지원...전년 비 논술전형 비중 줄어

2020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개막이 임박했다. 오는 6~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수시모집은 대학별 전형이 마무리 되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수시모집 비중은 역대 최고치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에서 전체 모집인원(34만7263명)의 77.3%인 26만8536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전년도(76.2%)보다 1.1%포인트 늘어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위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과 내신·비교과 활동을 두루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절반이 넘는 54.6%(14만6463명)에 이른다. 흔히 '학종'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32.0%(8만6041명)를 차지한다. 이어 실기전형(1만9594명), 논술전형(1만2056명) 순이다.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다. 서울지역 15개 대학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평균 선발비중은

43.7%에 이른다. 서울대는 아예 수시 모집인원 전원(2495명, 정원의 제외)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다. 고려대(74.4%)와 성균관대(71.6%)도 수시모집 인원의 70% 이상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 운영 대학도 주로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3개 대학 중 20여곳이 서울 소재 대학이다. 다만 논술전형 선발인원은 감소 추세다. 전년도 대비 1212명 줄어든 1만2056명을 논술전형으로 뽑는다. 논술과 같이 사교육 유불이 우려되는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 국정과제다.

고르기회전형이 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이다. 총 4만6327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보다 2956명이 늘었다.

지역인재전형도 규모가 확대됐다. 총 85개교에서 1만6103명을 뽑는다. 전년도보다 2699명 늘었다.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지원한 전형은 취소된다. 또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 지원을 할 수 없다. 복수 합격자도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올해 고2가 대상인 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모집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시모집 확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수시모집을 고려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가 사실상 가장 좋은 기회다. 2020학년도 수시모집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경찰, '생활·피싱·금융사기' 전담반 구성

메신저 피싱 4배 증가...단속·예방 동시 추진

경찰이 서민을 울리는 3대 범죄 전화금융사기, 인터넷사기, 불법다단계를 대상으로 총력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11월30일까지 분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사기범죄 전담반을 구성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사기범죄는 약 27만건(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23만건)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는 올해 상반기에 1만9928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피싱 사기는 2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 3대 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불(不)' 범죄로 규정했다.

전담조직은 수사부서와 홍보부서로 구성해 단속과 예방활동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슈 판결

대법원 "변조한 주민증 있어야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가능"

임대차계약 때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합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4월 강원 홍천군 소재의 한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 '7'을 '1'로 고쳐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씨는 해당 건물주가 보호자를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생년월일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보호자와 건물주가 사이가 좋지 않아 보호자를 확인하면 자신이 딸이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재판에서 이씨는 계약 당시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고 종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며 도장은 가져가면서도 신분증 등 인적사항 증명 서류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는 계약 증개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시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체결 이전 주민등록증을 총 2번 발급 받았고, 이 2장을 감정한 결과 위변조 흔적이 없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주민등록증 이외의 다른 주민등록증이 변조대상이 됐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 "검찰은 주민등록증 중 어느 게 변조대상이 됐는지 특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조의 구체적 방법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계약 증개인이 이씨로부터 주민등록증 자체를 받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1

의사·종교인·예술인 등 전문직 성범죄 증가

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 중 의사, 종교인, 예술인 등 전문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피의자에서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어섰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강간·강제추행 피의자 입건자는 11만7000명으로 2014년 2만936명에서 2018년 2만5355명으로 21% 증가했다.

이 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만936명 중 638명으로 3.0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730명(3.37%), 2016년 863명(3.7%), 2017년 1191명(4.65%) 등 매년 입건자가 늘어 2018년에는 전체 2만5355명 중 전문직이 1338명(5.28%)으로 5%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4년 638건에서 2018년 1338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은 의사 539명(11.3%), 종교인 510명(10.7%), 예술인 407명(8.6%), 교수 167명(3.5%), 언론인 59명(1.2%), 변호사 28명(0.6%) 순이었다.



가을이 왔다. 원만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독성향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황화 코스모스 길을 거닐고 있다.

전남예술고, 사설학원장 채용 운영

시민단체, 문제 제기

전남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 사설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남예술고는 전공실기 지도 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전남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공실기지도 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예술고가 채용한 전공실기지도 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원장이 실기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다. 시민모임은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행과 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 강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입장을 대변했다"며 "이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 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각칼, 자물쇠로 잠긴 인허군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잠깐이라도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서울시 129]

h-well 국민건강검진
[고객센터 1577-1000]